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안(案)에 대한 다섯가지 우려와 대책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Korea) 고위원탁회의 건의문

2015년 6월 26일

SDSN¹⁾-Korea 고위원탁회의

대표 양수길

고위자문회의 의장 이흥구

회원총회 회장 김영길

정부가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UN기후변화협약(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가 출범시키려고 하는 신(新)기후체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²⁾을 발표했습니다. 동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된 203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시나리오 네 가지를 그 중 가장 과감한 편인 제4안을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2030년까지 실현하고자하는 감축 후의 목표배출량이 정부가 2020년까지 실현하겠다고 그간 국내외에 공언해왔던 감축 후의 목표배출량을 초과합니다(참조: 別紙그림,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즉,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어도 10년 이상 훗날로 미루고 2014년에 정점(peak)을 실현하겠다고 했던 기존의 감축계획을 2020년 이후로 대폭 후퇴시키겠다는 정책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저희SDSN-Korea의 고위원탁회의 위원들이 대체로 공유하는 다섯 가지의 우려를 표명하고 동 목표안의 재산정을 건의합니다.

첫째, 지난 7년에 걸쳐 정부가 제시해 온 국제적 공약을 철회함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 우려됩니다.

기존의 2020년 목표치는 한국 정부가 2009년 11월에 대내외에 최초로 발표한 것입니다. 당시의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UNFCCC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에 각국은 “me first”의 정신으로 임해야 하며 한국은 이를 솔선수범하겠다는 연설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참신한 온실가스감축 자세를 보여 국제사회의 주목과 기대를 모은 바 있습니다. 동 감축목표는 작년 1월 박근혜정부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통해 확인하였고 또한 작년 6월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통해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1) UN 반기문 사무총장이 2012년 8월 9일 발족시킨, 지속가능발전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글로벌 전문기관 네트워크. UN의 포스트-2015 지속가능발전어젠다 개발을 지원하고 각종 지속가능발전 문제에 대한 과학기반 분석과 해법 제시, UN과 각국 정부 및 시민사회에게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해법 제시와 이행 추진을 추진. 국제전략이사회(Leadership Council)가 운영. Director: Jeffrey Sachs 미국 Columbia 대학교 교수 겸 UN사무총장 MDGs 특별고문. 주요 국가 및 지역별 네트워크로 구성. 한국SDSN(‘SDSN-Korea’)는 2013년 10월14일에 임의단체로 출범. 대표: 양수길 SDSN 국제전략이사회 이사. 고위자문회의 의장: 이흥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회원총회 회장: 김영길 UN Academic Impact Korea 회장. 운영조직: 회원기관총회 및 고위원탁회의(고위자문회의 및 전략·연구협의회). 임시사무국: KDI국제정책대학원. 웹사이트: www.unsdsn.org.

2)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286&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523060>

박근혜 대통령 역시 2013년 12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GCF사무국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약속한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로 설정하고, 부문별로 감축실적을 점검하는 등 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혁신적 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해 나갈 것”이며 “한국은 기후변화 분야의 창조경제 구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성장과 환경이 선순환하는 체제를 지구촌에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모든 나라와 국제기구,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또 박근혜대통령은 작년 9월 UN기후정상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기후행동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금세기 말까지 지구온난화를 2°C 이내로 그치게 하려면 모든 나라가 응분의 기여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포스트-2020 기후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내년에 제출하고자 준비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해 한국의 적극적 온실가스감축 자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처럼 지난 7년 간 줄곧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배출 감축정책을 추구하겠다고 국가 정상 차원에서 매우 명시적이고 뜻 깊은 정치적 공약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자세는 OECD 녹색성장전략 리더십, UN Rio+20 정상회의 의제 설정과정에서 녹색성장전략을 의제화하려는 부단한 외교적 노력, 새로운 국제기구 GGGI의 설립 리더십 및 GCF 사무국 유치(인천 송도) 등 적극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전제로 하는 한국의 일련의 국제적 이니셔티브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적극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격려하는 주요 모범사례로 뚜렷이 각인(刻印)되었습니다.

한국의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이번에 제시된 4개 시나리오 내에서 설정된다면 이것은 지금까지의 국제적 공약과 기대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결과 기후변화 협력에 대해서뿐 아니라 외교, 안보, 경제 등 여러 국제협력 부문에 걸쳐 한국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 우려됩니다.

둘째, 대내적으로도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고 그 결과 특히 녹색혁신과 창조경제의 열기가 식어갈 것이 우려됩니다.

녹색성장전략의 핵심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에너지시스템의 재편과 이를 위한 에너지기술혁신 및 이에 따른 투자 활성화에 있습니다.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이 2009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 발전, 산업, 상업, 가정, 수송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에너지이용 시스템의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기술혁신이 확산되기 시작하여 수많은 벤처·중소기업들이 녹색기술·제품·서비스 개발에 투신해 창조경제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궁극적인 동력이 적극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신뢰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안들은 배출감축정책을 대폭 후퇴시킴으로써 그러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녹색성장의 추진동력을 약화시켜 기후변화 부문에서 창조경제의 열기를 냉각시킬 것이 우려됩니다.

셋째,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변환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청되는 과제가 기후변화가 2°C를 초과하지 못하게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온실가스 배출감축입니다. 정부의 Post-2020 감축목표안들은 박근혜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이에 대한 “응분의 기여”에 못 미치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것은 윤리적 소명과 민족적 자긍심의 문제이고 또 국제적 리더십 차원의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후손들에 대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인류사회는 2012년 Rio+20 UN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환하기 위한 행동의제를 2015년 9월 UN정상회의에서 합의해 국제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실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동 ‘포스트-2015 지속가능발전 어젠다’의 목적은 20세기를 통해 인류가 추구해온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거시적 경제성장 일변도의 발전을 추진하면서 인간을 소외시키고 지구환경의 파괴를 마다하지 않음으로서 인류사회의 지속성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을 반성해 ‘인간을 중심에 두고 지구를 배려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변환(transform)’하겠다는 것입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모든 회원국들이 그러한 행동 어젠다에 대한 협의와 협상을 마무리하는 2015년이 우리 세대가 인류사회의 발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에 착수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 모두가 한 결 같이 그러한 변환을 위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가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초기 대비 2°C 이하로 억제해 인류의 재앙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올 12월 파리 COP21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신기후체제의 인류사적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G7국들은 지난 6월 7~8일 독일 Schloss Elmau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자국들을 위시한 세계 모든 국가들이 COP21의 성공을 위해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배출을 IPCC가 제시한 40~70%의 범위 중 최고폭(70%)쪽으로 감축해야한다고 합의하고 이를 솔선수범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노력을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진두지휘하고 있고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분의 기여”를 약속하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한 지도자의 한 분이십니다. 지구 문명을 지속성 위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지도자들 반열(班列)의 중심에 이들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작 현세대 한국인들이 이러한 인류사적 변환에 기여자가 될 것인가 혹은 방관자 내지 무임승객이 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처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선택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여할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인류에 대한 윤리의 문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6월 18일 발표한 회칙(回勅)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위기가 누구보다도 세계의 수십억명의 가난한 인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희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동료 인간들에 대한 책임” 차원의 도덕적 과제라고 선언했습니다. 기후변화행동을 감시하는 국제환경단체인 ‘기후행동트랙커(climate action tracker)’는 한국의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안들은 온난화 2°C 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더러 자기 대신 깊은 감축을 하라는 뜻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동료인간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윤리의 소명일 뿐 아니라 민족 긍지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윤리와 긍지를 지킬 것이냐 여부는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의 부상을 계속할 것인가 혹은 포기할 것인가 차원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뿐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차세대와 그 후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속에서 생존을 걱정하며 살지 않도록 보호해 줄 책임이 걸려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선택이 바로 지금 COP21에 제출하고자하는 우리의 INDC가 세계적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 플러스가 될 것인가 혹은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COP21은 2°C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신기후체제 도출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2°C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글로벌 온실가스배출이 늦어도 2020년대 초까지 감소세로 돌아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국제적 합의는 올해 이후로는 이를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금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시나리오들은 이러한 인류사적 노력에 기여하기 보다는 “우리는 아직 개발도상국이니까” 무임승차하겠다는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을 국제사회는 한국이 무임승차를 위해 개발도상국이라고 억지 부린다고 볼 것이 우려됩니다. 누가 보아도 신흥선진국인 한국의 이러한 선택은 세계 여러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자세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안들은 이러한 여러 차원의 책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우려입니다.

넷째, 세계 주요 배출국들은 역사적 책임론과 무관하게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거의 영화(零化)해나가야 합니다. 7대 배출국인 한국도 이에 따라 장기 배출 감축량과 감축경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2050년까지 요구되는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의 경로를 적정화하는 ‘심층저탄소화경로(NDDP)’로부터 INDC를 역산(backcasting)하는 분석방식의 틀에서 볼 때 2030년 이후를 고려하지 않은 2030년까지의 BAU기반 감축목표 설정방식은 ‘뒤로 미루기’ 식의 감축시나리오로 귀결되어 2030년 이후의 감축을 어렵게 하고 경제와 산업에 실로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을 초래할 것이 우려됩니다.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배출 감축량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축되어야 할 총 배출량은 궁극적 온난화 억제목표 2°C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당장의 편한 선택은 나중의 무리한 감축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감축목표안이 이런 선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와 산업 차원에서 특히 부담이 되는 것은 화석연료의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과제인 만큼 에너지관련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에 초점을 두고 논한다면 2°C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21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산화탄소(純)배출을 모든 나라가 영화(零化)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 2050년까지 모든 주요 배출국들이 역사적 책임분담론과 무관하게 이에 근접하는 매우 낮은 수준(개인당 1.6톤 내외)으로 ‘심층저탄소화’해야 합니다(IPCC, IEA, SDSN 등).

따라서 2030년까지의 탄소배출 적정 감축경로는 2050년까지 어느 만큼의 심층적 배출감축을 해야 하고 이를 최소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적정경로는 무엇인가 하는 장기적 ‘심층저탄소화’ 경로 설정 문제를 풀고 그 해답에서 2030년까지의 감축경로를 역산(backcasting)해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SDSN, IPCC, IEA, World Bank 등 모든 국제 경제 기구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에 따라 도출되는 2030년까지의 중단기적 시나리오는 저비용의 단기적 조치 이외에 기술개발, 인프라 투자 및 도시 재설계 등 단기적으로는 고비용을 초래하는 장기적 조치도 포함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Post-2020 감축목표안들은 궁극적 목표로부터의 backcasting이 아닌, 2030년까지의 배출전망치(BAU)를 설정하고 이에 대비해 “경제

와 산업이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의 감축량”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기에 ‘뒤로 미루기 식(式)’의 소극적인 감축 시나리오 도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기적 저비용화 해법으로 배출정점을 뒤로 미룰수록 고(高)배출 구조가 장기화(lock-in)되어 장기적 배출감축목표에 이르는 2030년 이후의 심층저탄소화 비용을 불필요하게 그리고 국가경제가 실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배출감축목표안 도출과정을 살펴보면 그 외에도 첫째, 배출전망(BAU) 대비 감축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가급적 GDP전망을 높게 잡고 제조업 비중을 높게 잡는 등 감축 후의 배출목표량을 부풀리려는 편향을 배제하기 힘들고 둘째, 배출감축노력에 따르는 기술혁신과 그에 따른 새로운 투자 등으로 인한 녹색성장효과, 그리고 저탄소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정책을 감안하지 않기에 배출감축으로 인한 경제와 산업에 대한 ‘충격’이 과장되어 소극적 감축목표안으로 귀결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UN자문 지속가능발전해법 국제전문가 네트워크인 ‘SDS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이 프랑스 지속가능발전연구소(IDDRI)와 공동으로 16대 배출국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팀을 구성해 각국이 국제 에너지기술 협력을 통해 부문별로 최적정 기술을 능동적으로 개발 보급해나간다는 가정 하에 시산(試算)해 본 결과 모든 나라가 경제성장 등 주요 발전 목표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2050년까지 개인당 에너지관련 탄소배출을 1.6톤 내외 수준으로 심층저탄소화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했습니다³⁾. SDSN-Korea의 전문가팀도 동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해 한국의 2050년까지의 심층저탄소화경로(National Deep Decarbonization Pathway, NDDP)를 시산해 한국에 대한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INDC도 NDDP를 먼저 도출해 backcasting 하든지 혹은 적어도 NDDP를 참조해 조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신기후체제에서는 에너지절약과 청정에너지가 국제경쟁력의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어 산업구조의 탈탄소화 경쟁이 전개됩니다. 우리의 가장 무서운 경쟁대상국인 중국이 선진기술을 도입하며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에 한 걸음 앞서 가야합니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우리 에너지집약산업의 공동화는 적극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으로 초래되기 보다는 오히려 소극적 방어적 감축에서 초래될 것이 우려됩니다. 지금부터 선제적 산업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산업의 녹색혁신노력을 배가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들에 대해 그 중 가장 소극적인 제1안도 과도하여 심각한 산업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높은 이산화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이 되는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에너지 집약적 주력산업이 이미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축이 쉽지 않고 이들 산업 부문이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국민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러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에너지집약적 산업구조가 새로이 전개될 신기후체제에 취약하다는 문제 제기로 받아들입니다. 이점에서 온실가스배출 감축은 거시적 장기적 구조조정 차원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

3) DDPP웹사이트(<http://unsdsn.org/what-we-do/deep-decarbonization-pathways/>).

감축을 제로섬(零和)의 국제적 협상게임으로 보지 말고 미래지향적 산업구조조정의 드라이버로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온실가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3.3%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1990년 온실가스 배출 통계 집계기 시작된 이래 플러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사실은 그간의 녹색성장을 위한 국민의 노력에 크게 기인하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는 한 배출감축이 경제계가 우려하는 만큼 어렵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too-big-too-fail' 구조의 재벌체제와 이를 유지시켜주는 관치금융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고조되어 1990년대에 그 대책으로 금융부문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하자는 여론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김영삼 정부가 재벌과 금융계의 여론을 수용해 1993년에 '신경제계획'을 내세워 우선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점진적으로 금융부문을 '선진화'해 나가겠다고 하다가 문제를 키워 1997년에 미증유의 금융위기를 맞고 국가경제가 도산(倒産)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2030년 이후를 내다보면서 온실가스배출 감축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저탄소'가 국제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로 자리 잡고 국제경제질서도 '고탄소'를 규제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한국을 주력산업부문에서 무서운 속도로 추월하고 있는 중국도 특히 국내의 석탄 연소로 인한 대기 오염이 너무나 심각해 2030년 이전에 이산화탄소배출의 정점에 이르겠다고 선언하고 매우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의 재편을 서둘러야 합니다. 에너지 집약 부문의 고부가가치화,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서비스화 및 전력의 저탄소화를 전제로 하는 산업공정의 전기화와 재료 혁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적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해 하루 바빠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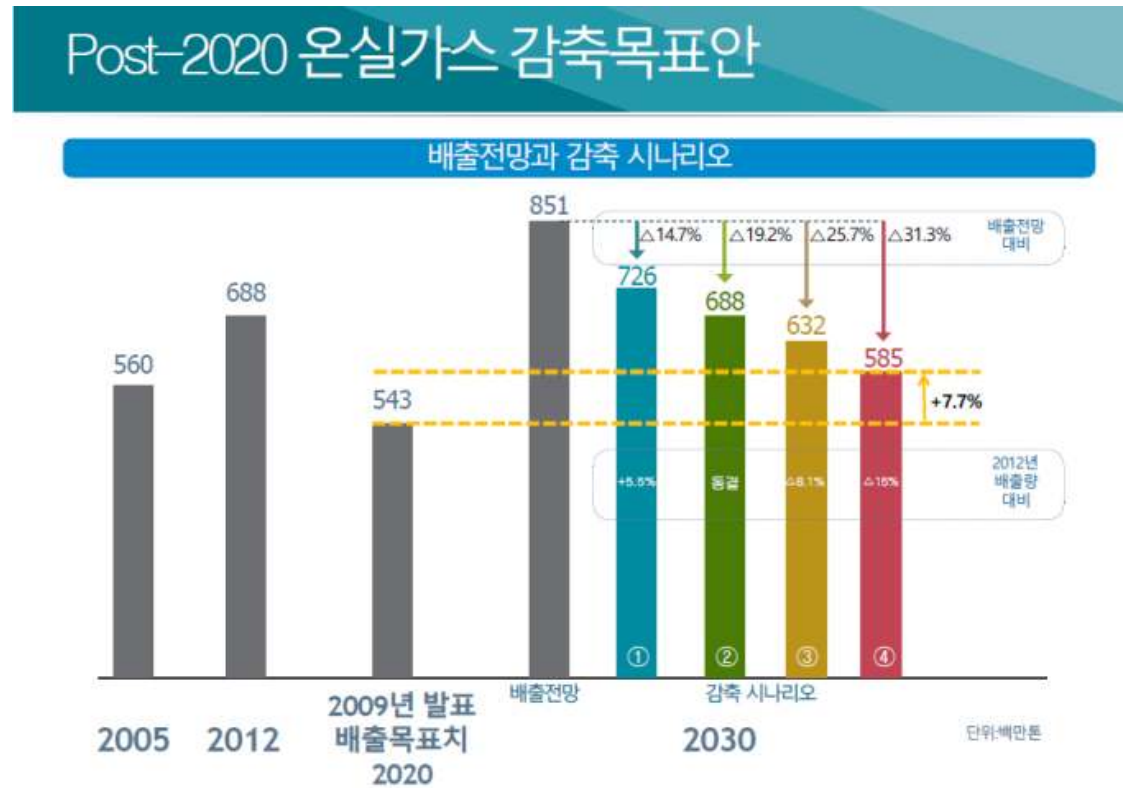
신기후체제시대의 산업발전 전략이 기존의 값싼 에너지정책에 의존하는 전략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신기후체제는 향후 2050년까지 글로벌 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환시켜 나가기 위한 '대(大)구조조정'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 지도도 근본적으로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여기에 위협과 기회가 있습니다. 선제적, 적극적, 과학적, 효과적으로 각종 에너지시스템을 효율화, 청정화해 나가는 나라의 경제와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서둘러 신기후체제에 부응하는 심층저탄소화 전략 및 그에 입각한 장기적 산업발전 전략과 산업의 녹색혁신노력 강화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적극적 공격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정책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정부의 6월 11일자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계획"이 잘못 수립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위의 다섯 가지 우려를 신중히 검토해 감축목표안이 새로이 도출되고 특히 산정 과정과 논리 및 통계자료들이 국내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에 대해 전문가차원의 토론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아가 연구 및 토론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과 분석역량을 동원해 2050년까지의 국가심층저탄소화경로(NDDP)를 도출해 INDC의 산정, 분석, 평가에 활용해야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INDC 제

출을 그 시한인 9월말까지 미루더라도 향후 약 2개월(7~8월)에 걸쳐서 감축목표 재산정 작업을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저희의 건의(建議) 말씀을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충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안⁴⁾



4)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p.30) 도표 수정.